요 약

▶ **최근 발표된 정부의 예산 10% 절감 방안과 부동산을 위시로 한 건설경기 침체,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쳐 국내 공공건설 현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음.**

▶ **조사된 현장은 모두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토목 및 건축 현장을 각각 2개씩 방문, 면담을 실시하였음.**

- 4개 현장 모두 낙찰률은 상기 조사된 내용과 비슷한 60~70%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, 최저 실행률은 105%, 최고 실행률은 120%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음.

▶ **실태조사 결과, 대외 환경 악화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승인 거부 내지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경색문제를 겪고 있었음.**

-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나 그 귀책 사유를 시공사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설계변경의 처리 기간도 신청을 한 후 통상 8~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.
- 최근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주자들의 에스컬레이션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

▶ **유동성의 문제는 하도급자의 기성 중 유보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생산체계 하부로 전가되어 중소업체들의 부도 내지 중도타절이 속출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음.**

▶ **설계변경의 지연은 발주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, 에스컬레이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 더불어, 유동성 리스크를 하부로 전가시키는 편향된 생산구조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.**

▶ **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여 정책적·제도적 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함.**

-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.
- 예산 10% 절감 방안은 신규 사업에만 적용하는 한편 저가 심의는 강화하여 현장의 파행적 운영을 원천적으로 봉쇄
- 공공공사 총사업비에 예비비 개념을 도입·시행하고 발주자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책임자제도의 도입이 요구됨.